"쓸 만한 곳이 없어요"…외면받는 광주·전남 상생카드

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제한에 병원·주유소 등 사용 못해
가맹점 찾기 힘들고 정부 예산 지원 줄어 할인율도 7%로 감소
규제 1년만에 발행액 큰폭 감소…골목상권 활성화 취지 못 살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광주·전남지역 상생카드(지역화폐)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데다 동네 마트부터 병원, 주유소, 학원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가맹점을 사용처에서 배제한 것이 되레 소비자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 예산 지원이 줄면서 상생카드 할인율도 덩달아 떨어져 사용 가능한 가맹점도 줄고 있는 상황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8월 광주지역 상생카드 발행액은 420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243억 5400만원) 대비 32% 감소했다. 사용액 역시 지난해 1월~8월 6514억 7600만원에서 4332억 5500만원으로 줄었다.

전남 역시 발행액이 2023년(1~8월) 9340억 400만원에서 올해 8월까지 7106억 3000만원으로 23.9% 줄었고 사용액도 같은기간으로 보면 지난해 8800억 1200만원에서 6595억 6100만원으로 25% 줄었다.

지역화폐는 지난 2019년 도입 이후 광주에서는 상생카드, 전남에서는 시·군별로 총 22종이 발행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평균적으로 전체 충전금액에 일부 비율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돼 초반에 인기를 끌었다.

광주상생카드는 2019년 도입 당시 5%대 할인율로 발행액은 963억원이었으나 수개월 뒤 할인율을 10%로 인상하자 2020년 8641억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은 1조 1038억원을 기록하며 호응을 얻었다. 액면가 1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9만원을 내고 구입하거나 충전해 10만원어치 상품을 살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신규 신청이 막혔고 이미 등록된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상생카드의 결제가 제한됐다. 대형프랜차이즈 업체보다 골목의 자영업자들을 돕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정부의 규제 취지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의 소비자들은 지역화폐사용처를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주유소, 마트, 식당이 아니면 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게가 거의 없는데다 주유소는 대부분 연매출 30억원이 넘어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다. 마트와 식당 역시 대규모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30억원이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생카드로 결제하려다가도 다른 카드를 꺼내야 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상생카드 충전 금액의 10% 할인이라는 혜택과 광주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편리함이 있었지만 할인율이 줄고, 가맹점에 제한이 걸리면서 시민들은 "굳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광주의 경우 2021년 7% 할인율로 변경된 이후 설·추석 명절 10%로 할인율을 높여 왔지만 올해 처음으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추석 명절 7% 할인율을 유지했다.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 사는 김영민(56)씨는 "상생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사용처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규제에 따라 영세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대형 가맹점과 비교했을 때 물건의 질과 할인의 정도가 달라 사실상 상생카드 할인을 받으나 마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영세상점은 물건의 회전율이 그다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신선도 등의 측면에서도 대형상점과 비할 바가 못된다"면서 "가격면에서도 영세상점의 할인율은 대형상점보다 턱없이 적어 상생카드 할인율을 물건 가격으로 오롯이 지불하게 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의 한 주유소 업자도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도 왜 카드 사용이 안되냐며 따지는 손님들이 있고 매번 사무실에 찾아와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이들도 많다"며 "우리도 그렇지만 손님들도 번거로워 한다. 고객들도 대부분 요즘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며 돌아서곤 한다"고 설명했다.

오주섭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단순 규제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금액조정이 필요한 업종은 풀어주는 등 사용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니만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생카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지역 저축은행 138억 불법대출 첫 재판

은행장·직원·브로커 법정에

광주지역 한 저축은행의 130억원대 불법대출과 관련, 은행장과 직원, 브로커 등이 법정에 서게됐다.

7일 오전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의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배임, 수재 등)로 기소된 저축은행장 A(64·구속)씨에 대한 공판준비 기일이 열렸다.

해당 은행의 여신담당자인 직원 B(40)씨는 배임 혐의로 브로커 C(55·구속)씨는 알선수재 혐의로 같이 법정에 섰다.

대출청탁자 D씨는 증재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2021~2022년 공동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70억원을 비롯해 총 138억원 상당 불법대출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동산업체, 건축업체, 비행기 플랫폼 업체 등에 대출 사례비 명목으로 각 3000여 만원씩 총 1억 5000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브로커 C씨는 대출 알선 대가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 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는 은행장 A씨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회사 직원인 B씨는 대출한도를 초과하거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대출을 해줬다고 보고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혐의에 대해 아직 검찰의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를 밝히기로 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별도로 이들에게 검찰 수사가 무마되도록 돕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역 변호사를 구속하기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통학버스 안전 점검 7일 광주시 북구 오치동 교육 연수원 주차장에서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화기 비치 여부, 안전표시 부착 등의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불법하도급 관련자 6명 입건 조사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망사고에서 불법하도급〈8월29일자 광주일보 6면〉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발주처인 금호타이어 배전실 관리자 등 6명을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입건된 이들은 금호타이어 배전실 관리자 A씨와 원청 업체 대표, 원청 현장 감독자, 하청 업체 대표, 재하도급 업체 대표, 감리 등 총 6명이다. 이 중 일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함께 받는다.

원청과 하청 업체 대표는 전기공사업 자격증이 없음에도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맡아 무등록 전기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기공사 중요 부분을 다른 업자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혐의도 있다.

전원 차단기를 내리지 않고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 등 4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배전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60대 노동자가 가스터빈 발전기 수리 작업 도중 감전당해 숨졌다. 사고 당시 3만 V에 달하는 고압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차단기가 올려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아버지가 장군 출신"…"친한 판사에게 말해 줄게"

가짜 인맥 내세워 수억 뜯은 2명 잇따라 구속

가짜 인맥을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이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7일 아버지가 '장군 출신'이라며 주식 투자자들을 속여 수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등산 동호회, 나이트클럽 등을 통해 알게 된 4명으로부터 3억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군 출신 아버지가 주가 조작 세력을 알고 있어 주식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와 아버지는 뚜렷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수익금을 유흥이나 명품 의류 구입 등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머니 명의로 된 광주시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숨어 지내다 경찰에 체포됐다.

같은 날 경찰은 판사들과 친분을 앞세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60대 B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5월 60대 C씨에게 "친한 판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유리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현금, 수표 등 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는 돈을 보낸 이후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고, 판사와 친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재범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여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